

한국에 있어서의 急進主義

尹 謹 植
(成 均 館 大 學 校)

〈目 次〉

- | | |
|---------------------------|----------------------|
| I. 뒤늦은 冷戰의 긴장완화 | III. 構造的 權力으로서의 急進主義 |
| II. 이데올로기 批判으로서의 急
進主義 | IV. 맺는 말 |

I. 뒤늦은 冷戰의 긴장완화

1963년경 이래 유럽의 분단국 서독에서는 “左派의 부흥”(Renaissance der Linken)이 진행되었고, 미국의 버클리대학으로부터 시발하여 세계화되었던 급진적인 학생운동은 유럽에 있어서의 냉전의 긴장완화를 촉진시켰다.¹⁾ 1968년에 절정에 이르렀던 서독의 급진주의인 학생운동은 1969년의 서독총선거에서 사회민주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小聯政의 형성을 가능케 했고, 그리하여 유럽이 긴장완화단계에 접어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전에서 “자유”와 동일시 되었던 미국식 모델에 걸었던 꿈은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다. 시초에는 그 미국식 모

1) 이에 관해서는 특히 Ernst Nolte, *Deutschland und der kalte Krieg* (R. Piper & Co. Verlag, München, 1974), SS. 501~551. 그리고 尹謹植 “60년대 학생운동의 배경과 구조,” 現代社會研究所刊, 「現代社會」(1984 가을), pp. 172~182 참조.

델의 확인으로서 파악될 수 있었던 미국에서의 민권운동이 소요와 투쟁으로 이행하여 국가, 시민의사 및 사회집단들의 통일성에 관한 의문을 부채질하였을 때에 核武器의 비김수가 공산주의진영내에서의 냉전(中·蘇紛爭)과 함께 긴장완화정책을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통일적인 평화로운 세계를 수립한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하고 이제까지 전복시켜야 할 것으로 간주해온 공산국가들의 사실상의 존재를 승인해야 되게 되었을 때에, 제 3세계국가들에서 기대했던 진보가 지체되고 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리고 사회주의가 진출하였을 때, 미국이 세계질서권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베트남에서 하려들어 미국자체의 전통들과의 갈등에 빠졌을 때에 균열들이 나타났다. 짧은 기간동안에 함께 닦쳐왔던 이 모든 과정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수호를 목표로 하는 항의를 초래했다.

바로 그때문에 미국에서는 마르크시즘이 제시한 반대모델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은 작은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기타국가들의 인테리층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모델의 진지한 추구는 자신의 전통에 거점을 두지 않았던 한도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위대한 꿈은 침몰하였고, 실망된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미국식 모델은 생명력있는 모델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지녀왔던 통일적인 기대의 압력하에 인테리층은 세계적으로 방향전환하여 마르크시즘에서 그 유일한 대안을 구했다. 물론 마르크시즘은 이제 미국식 모델이 동원했던 민주주의의 모든 요소들, 즉 아래로부터의 '기초민주주의'(grass-roots-democracy), 개인의 뜻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을 통한 계몽, 과학에 의한 근대화, 왕래와 기회의 평등, 토론을 통한 연대적인 시민의사의 형성, 계몽을 통해 하나의 세계속에서 합리적이고도 인간적인 사회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어야 했다. 그 모든 것은 사회과학의 새로운 規定을 요구했고, 이 새로운 規定은 계몽사상·마르크시즘·무정부주의적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변종들로 구성되어 넓은 전통들을 주장하면서 빈틈없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항의는 시초에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계몽사상의 저수지로부터 급수를 받아 미국식 항의의 모델을 지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통과 관계들이 대립에 빠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학생소요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걸게 됨에 따라, 그러한 전통이 자신의 전통과 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항의는 반민주적인 성격을 띠고 마르크시즘의 대안으로 합류했다.

동독에서 서백림에로 망명한 바 있는 서독의 급진적 학생운동의 한 지도자인 뚝취케(Rudi Dutschke)는 그의 글 “국제적 해방투쟁의 역사적 조건들”에서 “反權威主義的 社會主義와 革命家들의 革命化”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²⁾

“오늘날 모든 수단으로 인간이 전쟁, 굶주림 그리고 억압적인 노동없이 창조적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관계들을 채택함을 막으려는 기존체계에 대한 모든 급진적 反對가 꼭 세계화해야 한다. 혁명세력의 全世界化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전 역사적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전세계의 非특권층들이 해방운동의 現實史의인 민중기반을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 기반에 국제적 혁명의 혁명적인 도약적 성격이 있다.

‘거대한 기업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세계시장에 카니즘의 테러리즘하에서 고생하고 있고, 자신들의 발전이 帝國主義에 의해 저해당하고 있는 민족들의 전체로서의 제3세계는 이미 40년대에 이러한 투쟁을 최초로 소련에서 ‘배반당한 바 있는’(트로츠키) ‘프로레타리아革命’의 인상과 경험하에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이미 그 이론에서도 항구적 혁명과정으로서 파악했던 바 민중성(대중성)과 혁명과정의 지속이다.

60년대에 알제리아, 쿠바에 있어서의 혁명적 변혁과 디엠독재에 대한 월남解放戰線의 부단한 투쟁으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미국 權力엘리트……의 역사적 곤경은 이제 社會革命運動들을 도시 가라앉히기 위해 美帝國主義의 유일한 正當化基礎인 反共產主義的 이데올로기를 해체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2) Julius H. Schoeps, Joachim H. Knoll, Claus-E. Bärsch, *Konservatismus, Liberalismus, Sozialismus* (Einführung/Texte/Bibliographien,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81), SS. 245~48.

오늘날 우리를 단결시키고 있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역사이론이 아니라 자유를 지경이면서 개인들과 그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민족들의 직접적인 이익들과 필요들을 치밀하고도 잔인하게 억압하고 있는 사회들앞에서의 生存的 구토이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감정과 정서의 이러한 급진적 변증법(마르쿠제)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국가화된 권위주의적 사회에 대해 더 강력히 단결토록하여 反權威主義者들의 급진적인 行動單位體를 가능케 했다…….

혁명가들의 혁명화가 대중들을 혁명화시키는 결정적인 전제이다.”

뉘츨케의 경우 반공산주의의 극복은 바로 울브리히트와 그의 관료제가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되었다³⁾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독의 대표적인 마르크스트인 아벤드로트(Wolfgang Abendroth)는 동독(DDR)을 “전 유럽에 있는 소련(!)블럭의 가장 반동적인 형성체⁴⁾”라고 불렀다. 동구의 몇 나라들(특히 체코)과 어느 정도까지는 소련에서도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긴장완화와 반냉전투쟁이 서독에서의 左派急進主義의 부흥과 그 부흥의 정치적 표현형태의 고유한 내용이 었다면 그것은 서방과 동구에서 냉전에 의해 規定되어 있는 체제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아직은 두체제의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접근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自由社會主義”라 부를 수 있는 활기찬 서방 體制收斂論의 부분⁵⁾으로서 간주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여 그 긴장완화와 반냉전적 투쟁자체가 베트콩과의 일체화의 발상을 소련과 동독의 일체화를 위해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면 전적으로 변화된 독특한 상태가 창조된 것이다. 거의 이미 명백히 인식되지 못한 이러한 대안의 배경앞에서 서독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연립인 大聯政의 “新東方政策”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기본적 중요성을 지닌 先決斷이 체코 개혁공산주의에의 소련(동독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어쨌든 정치적인 좌파급진주의는 별로 큰 학생동원력없이도 체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지속적인

3) Nolte, 1974, 앞의 책, S. 551

4) 1962년 12월의 <Konkret>

5) Nolte, 1974, 앞의 책, S. 551.

힘으로 작용했다. 즉, 유럽에 있어서의 냉전의 긴장완화를 초래했다. 그 단적인 표현이 본에서의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연립정부의 구성으로 결과되었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기조로 하여 유럽, 특히 서유럽전역에 걸쳐 긴장완화가 촉진되었다. 그 긴장완화과정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지에서의 이른바 “민주화”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유로공산주의의 부상과 함께 이태리공산주의의 보수주의자에 대한 “역사적 타협”의 제안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냉전의 긴장완화과정속에서 좌파급진주의는 정치의 전면에서 퇴조하게 되고, 그러나 또다시 미·소간의 이른바 “新冷戰” 단계에 접어들면서 반미주의적인 반핵 및 평화운동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미·소간의 “新冷戰” 단계는 또 한편으로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냉전의 긴장완화과정의 촉진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 中共과의 관계정상화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이러한 긴장완화과정속에서, 역으로 한반도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긴급조치국가로서의 이른바 “維新體制”의 대두와 함께 긴장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풀기 어려운 모순들 속에서도 “左派의 復興”은 시간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그런 뜻에서 1980년대에 표면화된 한국좌파급진주의에게는 뒤늦은 冷戰의 긴장완화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II. 이데올로기 批判으로서의 急進主義

한국에 있어서 학생운동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된다. 즉 한국적인 “左派의 復興”이 일어났다. 그 좌파급진주의사상은 주로 “民衆民主主義革命論”으로 대표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의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은 본질

적으로 미국식 모델에 관한 꿈을 기초로 한, 기껏해야 반권위주의적이
고도 “浪漫的”인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운동은
“4·19선언문”의 다음 표현들을 벗어나는 것이 못되었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 전제에의 과감한 투쟁의 계획을 장하
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름 느끼는 것과 꼭 같은 논리의 연역에서 민족주의를
위장한 백색 전제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자부한다.”⁶⁾

물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에 있어서의 冷戰의 긴장완화’에
작용했던 ‘左派’의 이론들이 논의되고,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 제 3
세계에 관한 이론들이 비판논의되었다. 이러한 비판논의과정에서 ‘韓
國社會學’의 새로운 정의문제가 ‘民衆社會學’이라는 표제밑에 논의되
기 시작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은 부각되지 않았다. 즉, 「시민민주주의적 전망에 갇힌 민중론」
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70년대에는 개괄적인 현실비판적
논거만으로도 자신을 저항적 존재로 위치지우는 것이 가능」⁸⁾했기 때
문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민중논의는 운동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사회비판적인 정치
분석을 요구했고⁹⁾ 이러한 사회비판적인 정치분석의 필요성은 한국사
회구성체에 관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에 관한
비판적 논쟁을 겪으면서¹⁰⁾ 左派急進主義는 주로 民衆民主主義革命論

6) 尹謹植, “냉전체제하의 반공경관,” 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 「現代韓國政治史」(1987), p. 160.

7) 이와 관련하여 1987년 4월호의 「新東亞」에 실린 “특별기획: 民衆社會學
論爭,” pp. 494~523. (이하 「論爭」) 참조.

8) 조희연, “民衆社會學的 發展의 深化論,” 「論爭」, p. 524~525.

9) 이와 관련하여 尹謹植, “社會批判의인 政治分析과 韓國政治學,” 尹謹植,
「第三世界の 이데올로기와 政治」(서울: 中央出版社, 1981), pp. 287~303
참조.

10) 이 논쟁에 관해서는 「창작과 비평」 무크 제 1호, 그리고 「民閭 核心
指導幹部가 暴露한 最近 學園街 共產暴力革命의 理論과 實體」(1987. 4),
(以下 「暴力革命의 理論과 實體」) pp. 118~167 참조. 물론 「市民民主革命
論」, 「民衆民主革命論」, 「三民革命論」, 「反帝民衆民主革命論 또는 民族

으로 나타났다.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또는 예속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해방이후 한국은 분단의 비극을 맞음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민중민족운동이 반제 반매판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운동으로 자기변신하게 한 의적상황이었다.……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민족민중운동은 반제국주의와 반매판독점자본 투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함이 민중민주주의이고 반제, 반매판의 민족경제의 완성이 민족혁명이다. 독재를 구축한 매판관료 세력의 외피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한국에 있어서 계급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매판독점자본, 신중산계층, 중소상공업자, 부농, 빈농, 노동자, 도시빈민의 7대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신중산계급과 상층중소상공업자 일부는 매판독점자본과의 관련성 여부와 민족의식의 회박성으로 인하여 실천적(정치적인) 민중개념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중민주주의 민족운동의 주체가 되는 혁명적 민중으로 중산층을 포함시키기에는 그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비타협적 민중주의보다는 타협적 개량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민중의 개념, 즉 실천적 개념으로서 민중을 먼저 매판세력과 분리시키고 중산층과의 실천적 경계를 두어 노동자계급의 상층기술노동자계층을 혁명적 민중의 개념에서 제외한다.”¹¹⁾

解放民衆民主革命論, 「民族民主革命論」, 「民族民衆革命論」이라는 개념적 대결이 있기는 하나 모두 본질적으로 볼 때 「시민주주의적 전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

11) 고려대학교총학생회 고려대학교언론출판연합체, 「일보전진」(1985년 여름), pp. 79~82. 이 밖에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의 概念을 定立하자」, pp. 23~27과 pp. 166~167, 그리고 全國學生總聯合, “光州民衆抗爭의 民衆運動史的 照明”[전학련연합심포지움자료집](1985년 5월) 참조. 이 「照明」에서는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이 “사회구조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인식한 사회민주화운동으로 발전, 아울러 광주민중항쟁에서 외세 특히 미국을 우리사회의 모순을 지배하는 주요세력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광주민중항쟁은 4월혁명이 달성하지 못했던 한국사회구조의 총체적 모순을 그 간 내적운동역량들을 길러온 제반 노동권들의 연대를 통하여 타파하고자 했던 민중운동”(p. 59)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예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론(pp. 5~7)에 기초한 “계급연합으로서의 민중”(pp. 7~10) 개념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결국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은 레닌주의(“쑨비에트마르크시즘”)를 수용하여 노동자계급을 혁명주체로 설정하고, 한국사회의 모순을 규정함에 있어 국가독점자본을 물적인 토대로 하는 外因으로서의 제국주의, 內因으로서의 파시즘, 보수자유주의세력과, 이에 대립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혁명적 인텔리간의 대립투쟁관계라는 양극모델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혁명적 민중”이 주체가 되어 프로레타리아(이른바 「무산계급」) 혁명과 독재를 거쳐 이루어지는 민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¹²⁾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운동진개과정과 함께 그 전략과 전술면에서 결정적으로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毛澤東의 矛盾論을 수용하면서 여러가지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이른바 1985년 하반기에 표방된 「反帝民衆民主革命論」은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대립투쟁관계를 한국민중과 ‘美帝國主義’ 사이의 대립투쟁관계로 파악하여 「反美救國統一戰線」의 형성을 당면과제로 들고 나왔다. 그경우 학생운동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勞學同盟」의 실현이며, 반제민중민주화운동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세력의 허상을 공격하면서 부르조아민주주의 세력에 결집되어 있는 계급을 해체시키는 과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1985년 하반기부터 1986년에 걸쳐 표방된 「民族民主革命論」은 “현 단계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대립투쟁관계는 노동자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민중과 내적·외적 독점자본과의 대립투쟁관계라 보고 당면과제로서 민족민주통일전선의 형성을 통한 「반제반파쇼투쟁」을 통한 「민족민주혁명」이라 규정하고 있다.¹³⁾ 그 주요매개로서 헌법제정민중의회 쟁취투쟁을 들고 나왔다.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혁명이 제 1보이며,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계급모순의 총체적 해결과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수해 나가는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이 제 2보라는 것이다.

12) 서울地方權察廳, 「制憲議會(C.A)구롭事件搜查發表(補助資料)」, 1987. 2, 특히 pp. 35~39 참조. 毛澤東의 矛盾論의 수용에 관해서는 한 예를 들면 학생운동권 油印物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제” 참조.

13) “暴力革命的 理論과 實體,” 앞의 책, pp. 141~151.

그러므로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民族統一主導勢力이 한국의 지배세력에 있지 않고 오히려 민중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革命的民衆>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내지 민중해방투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민중민주주의혁명정권을 세워 궁극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민중을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여 그 폐쇄적인 개념을 끝까지 밀고나갈 때 韓相震교수가 지적하듯이 “요즈음 운동권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남한해방론, 즉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이미 해방된 사회인데 반해 남한은 해방되어야 할 사회라든지, 또는 미국같은 자본주의국가는 민중운동의 적인데 반해 소련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동지라는 식의 파격적인 주장마저 나오게 된다.”¹⁵⁾

요컨대 1980년대에 한국에서 나타난 좌파급진주의로서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제 3의 해결」 시도로서의 반권위주의적 사회주의개념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 레닌주의, 毛澤東의 矛盾論,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수용하여¹⁶⁾ 개념화시키고 있음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체제나 실재하고 있는 공산주의사회들에 관한 비판적인 현실인식은 찾아 볼 수가 없다.

14) 五個大學 學徒護國團, 「韓半島의 危機狀況과 民族統一」(1984.5), 第1回 五個大學共同學術집포지음 참조.

15) 「論爭」, 앞의 책, p. 520.

16) 이에 관해서는 「共產革命家 鬪爭指針書 'M.L 主義黨' 關聯 意識化教材 分析」, 1981.1. 참조. 따라서 1980년대 한국에 있어서의 “過激急進主義”思想이 결정적으로 마치 이른바 유로플뮤니즘, 네오·마르크시즘, 從屬理論, 解放神學 등의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오류이다. (한 예로 全得柱外 共著, 「過激急進主義와 自由民主主義」(서울: 평민사, 1985), 특히 p. 175 참조).

Ⅲ. 構造的 權力으로서의 急進主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본질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현 한국사회를 예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문제는 독점자본의 운동논리라는 점에서 계급문제이고, 외세와 관련해서는 민족문제이고, 양자가 국가 권력을 통해 자기논리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는 민주화문제로서 이 세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 과제는 비타협적인 반제국주의 반파시즘투쟁을 통해 반민중적 계급독재(“신식민지예속군사파시즘”)를 타도하는 것이라 한다.¹⁷⁾

그리하여 현존 사회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 권력(미일제국주의·군사파시즘·매관독점자본)에 대결하는 구조적 권력으로서 “民衆”개념을 이론화하고있다. 혁명주체로서 그러므로 실천적인 역사주체로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계급연합’으로서의 민중(‘被支配階級’)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이면서도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주장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화”란 그것이 보다 근원적인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민중이 정치화되고 그렇게 정치화된 민중이 민족문제를 자기 과제로 擔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추진된 공업화정책은 한편으로는 고도성장기로 구가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계급 분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존적 투쟁으로서의 계급적 성격을 띤 사회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중에서도 노동운동의 중요성이 사회정치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런 과정속에서 유신체제에로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저항은 부마사태로까지 나타났다. 그리하여 점차 운동세력 내부에서도 그러한 운동적 저항을 갖는 부류의

17) “暴力革命的 理論과 實際,” 앞의 책, p.38.

비중은 더욱 부각되고, 아울러 이념적으로 사회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의 해계모니”를 강조하는 운동집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그 구조적인 조건들의 성숙과 함께 보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은 계급혁명적인 민중운동론을 제시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규정함에 있어서 국가독점자본을 물적인 토대로 하는 外因으로서의 제국주의, 內因으로서의 파시즘, 보수자유주의 세력과 이에 대립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혁명적 인텔리간의 대립투쟁관계로 보고 있다. 민주·민족문제의 해결주체는 계급연합으로서의 基層民衆(構造的 權力)이지만 운동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주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운동의 당면과제는 우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민중민주혁명정권을 수립하는데 있으므로 보수자유주의세력인 중간계층에 대하여는 전술적으로 제후하되, 제후하는 본질은 그들의 반민중성, 반민족성에 대한 철저한 폭로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교조적인 도식적 해석에 따라 “주체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이제 改良主義的인 民主化의 가능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종속적 경제구조의 전면적 清算과 자립적 發展戰略의 주체로서 民衆의 革命鬪爭力量이 서서히 현재화해가고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단결과 영웅적 투쟁을 줄기차게 수행하면서 그 본질적 특성인 비타협적인 민족해방투쟁의 道程으로 전진하고 있다.”¹⁸⁾고 평가할 수 있었다. 분명히 이른바 「6·29 민주화선언」 이전까지 경제적 민중의 정치화는 고조되고 있었다.

만일 80년대에 민중운동이 “계급적인 민중운동단체”¹⁹⁾에로 발전하였다면,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 대두하게 된 역사적인 사회적 배경은 그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민중민주

18) 위의 책, p. 53

19) 「論爭」(앞의 책)에 실려 있는 조희연, “民衆社會學의 發展的 深化論,” p. 527.

주의혁명론이 「제 3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테두리안에서 이론화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위해 國土統一院長官 許文道가 1986년 11월 28일 寬勳討論會에서 행한 그의 연설문 “左翼의 「統一戰線戰術」과 思想의 昏迷”에서의 인용이 요구된다.

“自由主義社會體制는 그 자신의 敵까지도 養育하고 장려한다……自由主義社會의 市民들은 심지어 그 敵들에 의해 再敎育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브레징카)는 얘기는 오늘날 中·高等學校에까지 번져간 左傾意識化敎師들의 존재를 떠올려준다. 自由社會의 市民들이 “그 敵들의 슬로건에 기만당하고, 市民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적들이 作成한 파괴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원래 소망한 바 自由와는 兩立할 수 없는 信條를 받아들여 모시는”(슈페터) 지경에 이르고 보면, 敵과 연동하는 左傾分子들이 관을 치고, 일부 右派까지 끌어들이는 統一戰線戰術이 발효할 무대는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최대의 政治는 역시 南北對決이다. 敵과 同志를 區分하는 것이 政治라는 意味의 政治, 저들이 우리의 存在를 全面否定하려는 試圖를 멈추지 않는 限, 北의 動向을 도외시한 남쪽의 삶이란 있을 수 없고, 이 存在條件을 도외시한 독선적 自由主義者가 있다면, 의도와는 달리 自由社會의 自己破壞에 봉사할 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現況이 아니겠는가.

左傾運動圈의 民族·民衆·民主主義의 民主와 保守野黨의 自由民主主義의 民主는 世界觀의 差異를 넘어 民主·民主化라는 말앞에서 서로 맞아든 것 같다……運動圈의 民族·民衆·民主主義의 “民主化”가 共產化를 얘기하는 것임을 保守野黨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意圖的 無知일까——保守野黨이 主軸이 되는 統一戰線形成을 위해서 말이다. 世界觀·價値定向·이데올로기가 다른 集團이 만가지 생각을 가진 ‘民主’라는 말앞에 간단히 약속하고, 明白한 共產革命시도를 보면서도 “民族·民主”라고 단단함으로 인해 自由社會內部에는 思想의 昏迷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自由社會의 自由가 스스로를 파괴할 敵方의 논리를 이미 치석케 한것은 물론이요, 그것이 스스로를 파괴할 病毒인지조차 헛갈리게 하는 狀況이 벌어져가고 있는게 오늘이 아닌가 싶다.……우리 사회에는 明示의으로, 名目的으로 左翼은 없는 사회이다. 그런데도 “極右保守”라고 한다면 新民黨은 左翼이란 말인가. 新聞까지도 “極右保守”라는 表現을 옮겨 쓰니까, 思想의 昏迷는 깊어가는게 아닌

가 싶다. “自由民主主義”의 世界觀에 대한 挑戰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의 삶의 條件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찌서 “極右保守”란 말인가. 左傾運動圈이 내흔드는 “民主化”라는 口號가 트로이의 목마임을 保守野黨이 하루 빨리 看破하여 우리 自由社會內에 던지기 시작한 思想의 昏迷를 걷어내기 바라야겠다.

그렇다면 “敵과 연동하는 左傾分子들이 판을 치고 일부 右派까지 끌어들이는 統一戰線戰術이 발효할 무대”가 무엇때문에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달리 말하여 “민족·민중·민주주의의 民主와 보수야당의 자유민주주의의 民主가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民主·民主화라는 말 앞에서 서로 맞아든” 政治社會學的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는 明示的으로, 名目的으로 左翼은 없는 사회”(그러므로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분법)라든가 “敵과 同志를 區分하는 것이 政治”(그것이 “官僚의 權威主義”라 표현되든 民중민주주의 혁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시즘”이라 개념규정되든)라는 의미의 정치개념에서 “自由社會”에서의 “자유”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기된다. 자본주의사회와 “자유”사회의 개념적 동일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공산주의진영내에서의 ‘冷戰’까지 지배하고 있는 세계사적 조건들하에서 그러한 ‘同一化’는 더욱 무의미하다. 이로부터 “階級對立이 制度된”(T. Geiger)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그렇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새로운’ 綜合을 시도한 급진적인 사회비판으로서의 반권위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民중민주주의 혁명론으로 대두케 된 政治社會學的 前提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이른바 “타협적 개량주의”를 거부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분

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60년 81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던 모스크바세계공산당대회에서 자본주의발전의 새로운 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채택되었다. 이 단계는 “독점기업의 權力과 국가의 權力이 자본주의질서를 구제하고 그리고 계국주의적 부르조아지가 노동자계급의 수탈과 광범한 住民계층들의 약탈을 통해 최대이윤을 증가시킴을 확보해줄 통일적인 기구로 된 것”²⁰⁾이라 요약되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관한 현대이론들²¹⁾의 구성적 특징은 그 이론들이 政治와 경제의 관계를 여전히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거쳐 매개시키고, 그러나 국가를 더욱더 강한 정도로 이러한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경우 국가는 그자체 ‘원래의’ 재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는 ‘제3’요인으로서, ‘밖에 있는’ 기구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재생산과정의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구조 法則的으로 규제된 물적인 관계로서의 경제적관계로부터 분리된 지배관계, 계급관계, 정치적 관계로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분리를 토대로 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모델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있어서의 二律背反性은 핵심적인 政治戰略의인데 있다. 즉 국가가 자본의 봉사자가 아니라 참다운 사회적 주체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이 질문은 누가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창조해낸 방대한 경제적 조종기구”를 장악하는가에 달린

20) Bernhard Blanke, Ulrich Jürgen, Hans Kastendiek, *Kritik der Politischen Wissenschaft 2. Analysen von Politik und Ökonomie in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Campus Verlag/Frankfurt/New York, 1975), S. 402.

21) 서독의 「젊은 社會主義者」(Jusos) 집단에서도 “國家獨占資本論集團”을 에워싼 논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항의적 기능을 가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Johano Strasser, “zur Theorie und Praxis der” Sta Mo-Kap-Gruppe < bei den Jungsozialisten” in: Jungsozialisten Informationsdienst, Bonn, Nr. 1 (1973)에서의 비판에로 소급된다.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국가기구의 장악이 “계급투쟁의 주문제”로 된다. 그리하여 사실상 점점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선 국가(정치)의 민주화이며, 국가의 민주화에 의해 사회적 생산관계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경우 국가는 분명히 노동운동과 민주적인 세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²²⁾

그런 뜻에서 분명히 “양극모델의 위협과 중산층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²³⁾ 그 경우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民主化的 戰略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민중운동의 급진화가 곧 중간계층의 보수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²⁴⁾을 문제시하면서 80년대의 새로운 정치적 재편기에 관해 내리고 있는 다음 표현은 관심을 끈다. 즉 “...운동의 이념의 급진화를 들 수 있는데, 한 사회의 총체적 재편을 도모하는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인식을 확실히 하면서 스스로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그 이념을 대중적으로 확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온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여러 측면에서 80년대의 사회운동은 70년대와 전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²⁵⁾ 이러한 과정속에 학생운동도 한때는 급진주의가 주도권을 잡는듯했지만, 지식인 종교인 문화인등 新중산층을 선두로한 일반시민이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정치의 긴장완화가 더욱 강요되었음은 물론 급진주의가 자율적으로 통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2) Bianke, Jürgen, Kastendiek, 1975, 앞의 책, S. 410. 에서의 재인용(이는 Autorenkollektiv der KPF 1972, S. 78에서의 인용임).

23) 「論爭」에 실려 있는 韓相震의 글 “民衆社會學的 ‘民衆論’ 批判,” 특히 pp. 516~519 참조.

24) 「論爭」에 실려 있는 조희연의 글 “民衆社會學的 發展的 深化論,” p. 531.

25) 위의 글, p. 527.